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9일 (음력 11월 2일) 화요일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각 후보들이 셈법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18일 광주·전남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고위 전략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경선규칙으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조사 50%에 뜻을 같이 했다.

당규상 권리당원은 50% 이하, 일반 유권자는 50%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 참여율은 최대치 일

여론조사 50% · 권리당원 조사 50% 각 반영

경선률 최소화 공감...여론전 · 당원관리 주력

반 유권자 참여율은 최소화시킨 셈이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인 안심번호를 활용해 진행하고 권리당원 조사는 해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 여론조사 배심원 당원을 3:3:4 비율로 적용하는 등 세분화시켰던 경선물을 최대한 간소화해 물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임한다.

이에 대해 입지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광주시장 후보 A씨는 "후보자들이 물을 가지고 알기위하는 건 온당치 않다. 물은 물일 뿐, 따르면 된다"고 밝혔고 전남지사 후보 B씨 역시 "당의 원칙이다.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후보 C씨는 "50대 50은 당헌당규상 원칙이고, 다들 예측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미묘한 입장차도 존재한다.

시장 후보 D씨는 "권리당원을 핵심(최대)으로 잡은 건 당원 중심으로 가지는 것으로, 민심(여론) 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넘어가면서 6대 4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주장은 당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리당원 전수조사시 적은 비용을 경선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국민의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약한 후보를 역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종당적을 체크할 수 없는 만큼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유권자를 적절하게 섞어 역선택을 막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이 공개돼 경선레이스에도 속도가 붙게 되면서 각 진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다수 후보들은 당심과 민심이 절반씩 반영되는 만큼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층 관리와 여론전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한 후보는 "권리당원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SNS 등을 통해 여론전, 대중전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후보는 "이제 광주시장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는 물론 야당의 비상식적 행보에 대한 비판 등 이슈파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햇빛 받는 메주 구례군 토지면 운주로 고택에서 9대 중부 이길순씨와 10대 중손 류정수씨가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주를 겨울 햇살에 말리고 있다.



부패한 국회

국민 10명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기판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혔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2.3%였다. 국민들이 전혀 또는 별로 참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회 가 8.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중앙정부부처 7.9%, 검찰·법원 등 사법부 7.5%, 지방자치단체 6.1% 순이었다. 대기업을 참람하지 않다고 본 비율은 71.6%였다. 시민단체에 대해 ~럽하지 않다고 본 비율은 55.8%로 공공부문 보다는 낮았다.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올해도 국회가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단체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정세균



노회찬



홍준표

‘지역인구 소멸 가능성 제기’ 전남 서남권 해결방안은

한은 목포본부 임준혁 과장 “정주여건 개선 · 일자리 창출 필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인구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 서남권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임준혁

과장이 18일 발표한 ‘전남 서남권 인구구조 변화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3.9% 증가한 반면 전남 서남권은 2.5% 감소했다.

전남 서남권은 목포시를 비롯해 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

남군 등 1개 시 8개 군을 말한다. 이들 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64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인구는 전남도청이 입주한 무안군을 제외한 1개 시, 7개 군이 2009년 말 대비 모두 줄어들었다.

이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면서 지역인구 소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인구 소멸은 특정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핵심가임여성)를 전체 고령인구로 나눈 비율이 미만을 하락할 경우를 그 지역의 인구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남 서남권의 경우 목포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임 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젊은 여성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꼽았다.

최남규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